

700MHz 주파수는 공공의 영역이다 전문가 한 목소리로 “700MHz는 지상파 방송에 할당해야”

통신사들의 제삼자 이익 추구 주파수 경매가 종료된 직후, 700MHz 주파수도 조속히 경매를 통한 통신사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통신산업의 주장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는 공공의 영역’이며 그 연장 선상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레싱턴 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4G 지상파 방송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방안 기자회견’에서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해 온 주파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주파수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00MHz 주파수는 공익적인 요소를 감안해 UHDTV, 3DTV 등 차세대 방송 영역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방송협회는 “통신사들은 과도한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자리에 참석한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인사들은 “주파수 확보 당위성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방송사들은 방송발전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금을 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조리 무시하고 주파수 경매 금액에만 사안을 한정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박에 해당 언론사 기자는 급히 자리를 뜨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차세대 방송 서비스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이

야기들이 오가며 동시에 해당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는 통신사들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 3팀장은 “주파수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700MHz 주파수는 반드시 지역방송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되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고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정부의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자체를 비판하며 “방송의 공적 서비스 확대와 효율성 정책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방통위가 지나치게 산업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고 힘을 더했다.

여기에 차세대 방송을 위한 700MHz 주파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으며 차세대 방송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와 통신사들의 사업적 실패, 그리고 향후 실시되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종편 특혜, 이제는 감동적이다

정부 광고 몰아주고 국회 종편 기사실 ‘미리’ 마련해

종편특혜가 이제 대놓고 노골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전국 21개 일간 및 석간, 경제지 중 종편 사업자 4개 신문이 정부집행 전제광고비의 40%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집행 광고비가 최대 24% 감소한 반면 종합편성채널로 선정된 조선·중앙·동아·매경에 1,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종편이 12월 본격적으로 개국을 하

면 이 같은 ‘광고 몰아주기’가 더욱 노골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종편에 대한 ‘감동적인’ 특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회 사무처는 아직 개국도 하지 않은 종편을 위해 국회 정론관 맞은편 70여 평의 사무실을 종편 기자실로 마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엄연히 기자실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국도 하지 않은 종편을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 ‘알아서’ 기자실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에 종편에 대한 황금채널배정 및 특혜를 둘러싼 비난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1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렐 법안 마련 및 주파수 경매 과열문제, 디지털 TV 전환 문제 등 방송계 안팎의 중요한 현안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렐 법안 지연에 관련해 김재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디어렐 법안에 대해 주무위원회인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방송광고시장은 이미 초토화되기 시작했다.”며 “모든 것을 국회에 떠넘기면서 방통위는 나 몰라라 하

는데 방통위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러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최측근이다 보니 방송통신 정책이 해바라기 정책 일색이다.”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돈 잔치’로 끝난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치솟은 주파수 경매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없이 주파수를 경매에

불인 방통위를 압박했으며 이는 통신사들의 1,000원 할인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2012년 예정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2011년 예산 1억 5천만 원을 들여 추진한 ‘디지털 마당’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가 저소득층을 위해 준비한 보급형 디지털 TV의 가격이 더 나은 성능의 대기업 제품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4면 특집기사로 이어집니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사설

방통위 국감, 시간만 길다고 능사가 아니다

국감은 '위대한 <국감스타> 탄생' 오디션이 아니다

2011 방통위 국감이 일단락되었다. 아마 다른 국감에 비해 시간으로 보면 제일 길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정을 넘겨 끝난 국감장에서 취재수첩을 덮고 밖으로 나오는 기자들의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아마 피감기관의 수장인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날 선 공방을 펼쳤던 국회의원들도 그럴 것이라 짐작된다. 방송통신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국감을 유심히 지켜본 국민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이번 방통위 국감도 다른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원들은 같은 내용으로 줄기차게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압박했고 최 위원장은 판에 박힌 내용을 마치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신경이 거슬리면 호통도 쳤고, 다시 의원들의 고향이 이어지는 순서가 반복되었다. 미디어법 법안을 둘러싼 질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종편 개국을 앞두고 미디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부안을 이미 제출했으며 종편은 미디어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법안 처리 지연' 책임 공방전을 벌였다. 시급히 법안을 처리하고 방통위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야 할 의원들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다'를 내세우며 교묘하게 본질 자체를 비껴나간 셈이다. 아주 참신한 대처법이다.

방송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번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방통위의 정책적 오류 등을 잡아내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당장 심각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주파수 가열 경매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이 별로 없었다. 지금 통신진영과 일부 언론사에서 '주파수 경매 자체는 긍정적이다' 혹은 '공익의 이유로 지상파가 700MHz를 할당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식의 철저한 기업이윤추구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조용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미디어법 법안 처리와 종편특혜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의견에 반박할만한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는 미비했다. 발전적인 논의가 있기 보다는 당장 문제가 많다고 의심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다그치거나 고성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실세'가 벌벌떠는 국감이 필요하다

국무위원 보좌관들 사이에서 국회 앞 서강대교는 일명 '고통의 다리'라고 불린다. 국감을 받으러 다리를 건너는 국무위원들의 신경은 곤두서기 일쑤고, 보좌관들도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기 때문이라. 아마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국감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의 날 선 공방에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만 급급했다. 정책적으로 발전한 모습은 전혀 없이 그저 최대한인 주파수 문제와 미디어법 법안,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판에 박힌 말'만 한 것이다. 이 대목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현 정권들어 최장수 국무위원이자 임기 동안 무려 4개의 종편을 출범시켰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실세'인 그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여지는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다양한 정책적 오류를 발견하고 지적한 의원들의 노력은 결코 폄하되거나 무시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한 정책 로드맵'에 어느 정도 수정의 여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접어야 할 듯하다.

이제 공은 지상파 방송사에 넘어왔다. 몇몇 정치권 인사들이 공정한 정책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지상파 방송사도 본격적으로 나설 때인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종편개국을 앞둔 현재, 디지털 전환을 1년 앞두고 주파수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하는 바로 지금이 향후 '대한민국 뉴미디어의 성공 척도'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MBC 파업 철회...노사협상 타결

MBC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단체협약을 비롯한 몇몇 쟁점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정영하, 이하 MBC노조)는 지난달 23일 "노사 협상 타결로 오는 26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MBC 노사 합의는 단협과 분사 현안, 지역 현안 등 세 축에서 이뤄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MBC 노조가 사측의 본부장 책임제를 수용하는 대신 사측은 본부장에 대해 보임 1년 뒤 조합원들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견제장치를 받아들일기로 했다. 이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2/3 이상이 해당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부장을 실질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이다.

또 공정방송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임 6개월 뒤부터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를 통해 관련자 문책

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방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관련자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면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외에도 제작 자율성과 지역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재철 사장은 "공정방송 침해 등과 관련해 누적인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선 그동안 문제시됐던 R등급 강제할당 조치 등을 개선하고, 상황평가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측은 진주-창원 MBC 통합과 같은 일방적인 광역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앞으로 광역화와 관련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MBC 경남의 경우도 광역화의 성과를 보여주고 공감대를 확산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노사 합의에서는 일부 양보가 있었지만 파업을 하지 않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항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영하 노조위원장은 "단협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조합의 최우선 과제는 망가진 공정방송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며 "당연히 파업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일정부분 쟁취한 결과로 타결을 선언하고 다음 투쟁을 준비한 것은 틀에 박힌 대응으로 저들의 도발에 맞서기 어렵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회사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 정계 겐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노조와 당사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 미래방송기술 세미나 열려

뉴미디어의 발전과 차별화된 시청환경에 부합하는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 마련된 '2011 미래방송기술 세미나'가 지난달 27일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총 60여 명의 지상파 방송사 직원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시청환경 이해와 미래 방송시청 환경의 기반 기술 요소 이해 및 인식공유, 그리고 미래 방송기술의 인프라 구축과 워크플로우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N-Screen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KBS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본부에서 주관했으며 참석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미래방송기술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종편, 미디어법 의무위탁 해야”

원포인트 입법 요구



미디어법 법안은 뜨거운 감자다. 각 방송사와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견 대립만 계속되고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된 원포인트 입법 등 실질적으로 시도가 가능한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방송독립포럼 주최로 열린 '미디어법 입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법 관련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 진영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미디어법 의무위탁'을 원포인트로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디어법 관련 법안을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종선

정책 혹은 대선정책 준비와 함께 해도 늦지 않다."며 우선 급한 것은 이번 달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종편의 직접영입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교수는 종편의 직접영입 시작은 방송 산업의 황폐화와 민주주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새로 영입을 시작하는 종편이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매체의 광고수입을 가져오는 것 뿐이고, 이러한 약탈적 수준의 광고유치 경쟁은 매체 경쟁력 급락과 방송 산업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송사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저비용-고시청률의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에만 몰입하고, 민주적 여론형성과 관련된 고비용-저시청률 분야를 외면하게 되면 이는 곧 민주주의 위기까지도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신 교수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종편에 특혜를 주고 미디어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현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제안은 원포인트 입법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편의 직접영입 부당성과 위헌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종선 이후 미디어법 관련 법안의 입법과 실행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지형이 바뀌길 기대하고 버티면서 종편 출범 전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입법에 힘을 실었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지상파 진영의 이 같은(700MHz를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해야 하는) 논리는 지나치게 공익성에 의존한 것으로.(중략)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타임즈 9/21 기사 <수조짜리 주파수 공짜로 달라는 지상파> 中) 700MHz 주파수를 통신사가 할당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공익성이 모든 가치에 앞선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새로운 장을 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00MHz 국감현장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위원장 응퇴를 묻는 질문에...최시중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 최장수 국무위원이죠?

"방통위가 '안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700MHz 국감현장에서 방통위가 미디어법 입법 지연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하며...원인이 그거였어?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고 남아서 다른 매체를 수탈해 언론계 전체를 파멸화시키는 것이 큰 문제" (김민기 숭실대 교수)

26일 방송독립포럼 토론회에서 종편이 개국할 경우 광고시장의 추이를 예상하며...미디어 생태계가 확실히 위협받고 있긴 합니다.

방통위 예산, 디지털 올인
내년 예산 8,308억 원
중 1,046억 원 투입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총 예산 8,308억 원 중 무려 1,046억 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통위는 2011년 예산에 8.3% 늘어난 액수인 8,308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해 취약계층 홍보, 수신환경 개선 및 융자지원 등의 사업으로 작년보다 412억 원 증가한 1,046억 원의 디지털 전환 예산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방통위가 계획한 1,442억 원에 비해 400억 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지만 최초 방통위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가 기획재정부와 조율을 거친 후 일부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 책정 외에도 정보보호 및 방송통신 콘텐츠, 연구개발 등의 예산을 우선 순위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양창근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건희 서상원 정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 백선하 최진홍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은해나루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

〈공지〉

방송기술저널 옴브즈맨 코너 "내가 편집장이라면?"

다양한 방송기술소식을 알리고 방송기술정책 전반의 여론을 주도하는 [방송기술저널]이 이번 129호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옴브즈맨 코너, '내가 편집장이라면?' 란을 신설했습니다. 평소 [방송기술저널]을 구독하시며 '나라면 이런 기사를 다른 방향으로 쓸 텐데' 혹은 '이번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등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journal@kobeta.com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내가 편집장이라면?' 코너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다음 호에 실을 것이며, 향후 [방송기술저널]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정표라 생각하고 보내주시는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대호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인협회 5기 회장 취임(이임 권태혁)

"5기 회장으로서 기술인연합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구성원간의 수평적 교류와 단합을 이끌어 내,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YTN 기술인협회 체육대회

▲일시 : 10월 8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33번지 다솔가든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

▲일시 : 10월 11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부산·경남지역 디지털 전환 교육 시행

지난달 21일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 KNN 방송기술인협회(회장 신종식)주관으로 부산·경남지역 디지털 전환 방송 기술 교육이 시행됐다.

지역 방송기술인의 디지털 마인드 확산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김성훈 부회장이 참여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700MHz 주파수에

대한 의견개진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및 디지털 TV 전환 문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활동내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교육은 지상파 방송정책과 뉴미디어를 이용한 신규방송, NPS 구축 및 활용사례, 영상 및 오디오 전송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정책적 교류와 뉴미디어의 발전상 등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 뒤를 이었다.



‘IBC 2011’ 라이 전시장 부스에 기대에 서서



유명준
KBS 콘텐츠특수영상부

유럽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2011이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라이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의 방송 미디어 그룹에서 5만 명 이상이 방문한 이번 전시회는 1,300여 개의 부스에서 방송과 영화산업 등 미디어 환경의 최근 경향 및 미래를 가능해 볼 수 있는 250여 개의 제품군을 선보였다.

라이 전시장은 연면적 40,000㎡, 13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크게 제작(Creation), 콘텐츠 관리(Management), 송출(Delivery)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장비들을 전시하였다.

6일간의 컨퍼런스는 ‘Connected TV& Devices’, ‘3D@IBC’, ‘SPORTS’, ‘Advertising: New Funding Models for Broadcasting’, ‘Next Generation Workflows’란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Connected TV’와 ‘4K’

1. 멀티스크린(M-Screen) 및 소셜 TV로의 진화

과거 몇 년간 주요 전시회에서 3DTV가 방송 산업계의 주요 화두였다. 그러나 올해는 ‘Connected TV’로 화두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의 확산을 계기로 TV시청 기능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로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부가 기능들이 TV와 결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SNS를 기반으로 한 소셜 TV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최대 SNS인 페이스북 북도 TV서비스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TV지니>, <모토로라>, <삼성전자>, <이매진 커뮤니케이션즈>, <넷플> 등의 사업자가 멀티스크린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를 시연하였다. 따라서 향후 단말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멀티스크린 및 소셜 TV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4K 디지털이미지, 그 이상의 진화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부분의 카메라 업체들이 4K카메라와 함께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선보이며 4K가 방송영상 업계의 큰 흐름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했다.



<소니>는 ‘Believe Beyond HD’를 슬로건으로 OLED, Digital 35mm, 3D와 4K 등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4K를 넘어 8K 이미징센서를 지닌 ‘F65 카메라’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 SR Memory Card, SR-PC4 및 SR-R4 디지털 레코더를 이용해 APPLE, Avid 등의 NLE와 호환되는 SRMASTER 라인업을 선보였다.

<JVC>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 이곳에선 ‘GY-HMQ10’라는 4K 소형 카메라를 전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K가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4K가 2K보다 뛰어난 화질을 지닌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파나소닉>은 올 4월 NAB에서 발표한 코덱 AVC-intra/AVCHD를 재정의하는 코덱체계 ‘AVC ULTRA’의 샘플 영상 상영과 그 상세 사양의 체계적 구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AVC ULTRA란 AVC-intra를 중심으로 하는 AVC/H.264 코덱 전체를 말한다. AVC-intra를 기초로 저압축/고속전송 레이트로 4K나 RGB 4:4:4 등의 비압축에 가까운 고해상도를 보관 유지하는 하이엔드에 적합한 코덱으로부터, 종래의 DV와 같은 25Mbps 이하의 저비트 레이트(bit rate)에서도 AVC/H.264 독자적인 압축기술에 의해 고화질이며 동시에 운용 효율의 좋은 코덱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까지 폭넓은 레인지에 적용가능하다.



<그라스밸리(Grass valley)> 부스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STRATUS라는 플랫폼이었다. STRATUS란 인체스트부터 편

집, 관리, 송출까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존 그라스밸리의 오토라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것이다.



Future Zone에서는 4K와 8K를 넘어 NHK Super Hi-Vision(SHV)을 전시했다. 2006년 IBC에서 전시된 이후 단순한 과학적 판타지가 거의 실용화된 단계로 진보해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8개 채널 비디오 스위처와 슬로우 모션 장비를 포함한 압축, 저장, 송출 등 SHV 연계된 장비 시스템(Full Line-up)의 실질적인 실현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었다. 오디오는 22채널에 2개의 sub_bass채널(앞, 뒤)을 구성하여 스크린이 아닌 실제 상황처럼 느끼도록 구현했다. BBC로부터 SHV화질의 런던의 수려한 전경을 생방송으로 전송받아 상영하였으며 Ultra-HD로 캡처된 우주 왕복선 발사 장면도 함께 제공했다.

예산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기술을 이용한 비용 절감 방법을 찾도록 요구한다. Tapeless 워크플로우의 다음 단계는 아마도 프로덕션 과정에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사용 할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많은 업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이론(Chyron)>, <KIT digital> 등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전시했고, <파나소닉>도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개발하고 있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제 어디에서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작업효율 면에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번 IBC에서도 이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고해상도 파일의 전송문제 및 보안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말이다.

3. 스테레오 3D(S3D) & 스포츠

전방에 내세웠던 2010과는 달리 새로운 기재로서의 신선함은 적어졌지만 3D의 관심은 올해도 여전히 뜨거웠다. 주요 카메라 업체들은 저마다 새로운 3D 카메라를 선보이며 시장선점을 예고하고 있다.



[소니 DEV-5K와 파나소닉 AG-3DP1]

<소니>는 XDCAM EX의 3D카메라 ‘PMW-TD300’과 첫 디지털 쌍안경 카메라 ‘DEV-5K’의 상세정보를 공개했다. ‘DEV-5K’는 쌍안경 타입의 케이스에 카메라 기능이 들어 있

어 3D도 찍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으로 양손으로 잡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혼자서도 3D촬영이 쉬운 조작성을 추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파나소닉>은 대표적인 3D카메라 ‘AG-3DP1’과 ‘HDC-Z1000’ 모델을 선보였다. 일체형 2안식 3D카메라 ‘AG-3DP1’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의 3D방송에 채용될 예정이다. ‘HDC-Z1000’은 1/4" CMOS센서가 채택된 소형 카메라로 2D 및 3D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ARRI>는 ALEXA M을 선보였다. 카메라 헤드와 바디가 광케이블로 연결되므로 좁은 공간에서 촬영할 때 유리하며 헤드만 내부촬영을 하고 바디는 외부에 설치해 둘 수 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3D 촬영에도 적합하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CAMERON PACE Group의 3D 리그와 ALEXA M으로 시스템을 구성했다.



유럽의 3DTV 흐름도 심상치 않았다. 유럽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생방송을 3DTV로 보기 원한다. 이에 영국 <BBC>는 6개국 월드컵 럭비경기를 세계 최초로 3D생중계한 바 있으며, 위성방송 BSkyB를 통해 3D 시험방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을 일본 <NHK>와 공동으로 전 세계에 3D로 위성중계를 할 예정이다.

<ORAD>와 <DELTA-Sport>는 이미지 tracking 장비들을 선보였고, <SterGen>은 2D 카메라로부터 소스를 실시간으로 3D(S3D) 변환시스템 ‘SterGen Live’를 전시했다.



IBC를 KOBA에

IBC 전시관을 둘러보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운영시스템과 편의사항에 대한 것이다. IBC에서는 미리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개개인의 바코드를 이용해 전시회 등록자들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출입증을 신속하게 발급해 주었다. 또 전시회 기간 동안 암스테르담의 버스, 트램(Trams), 지하철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무료로 제공해 대중 교통수단으로 전시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관 지도, 컨퍼런스 프로그램, 장비전시 리스트 등의 정보를 담은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전시회 관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전시관이 대화하기 좋은 카페 분위기로 커피와 차를 제공해 Buyer나 업무 관련자가 방문했을 경우 실재 구매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관람객 대부분이 학생으로 장비 홍보, 전시에만 치우친 KOBA와는 사뭇 달랐다. 예로부터 무역에 능하여 기본적으로 자국어인 네덜란드 사람들은 관광과 비즈니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듯하다. IBC의 이러한 진행과정을 모델링한다면 앞으로 KOBA 행사 진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나라도 600년 역사의 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뛰어난 방송기술의 총 집합체로서 세계 뉴미디어 시대의 선두를 열어가길 KOBA에도 다양한 콘텐츠와 수준 높은 서비스가 더욱 보강되길 기원해본다.

2011 방통위

새로운 방송기술을 발굴하고 알리며 다양한 관련 정책의 여론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 정책지 <방송기술저널>은 2011년 10월 5일 129호부터 '2011 방송가 핵심 키워드를 읽는다' 특집을 신설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정책은 물론 향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강해 나가야하는 방송정책을 소개하고 진단함으로써,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순서는 '2011 방통위 국감을 진단한다'로 선정했으며, 이어지는 특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부처의 국정집행을 국회가 면밀히 따져보고 그 공정성을 묻는 국정감사는, 자칫 편파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관의 행정수행성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시하는 합리적인 권한을 말한다.

그리고 그 권한에는 당연히 정부부처인 방통위위원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판·견제 기능도 포함되는데,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는 주파수 경매 및 미디어렐 법안 문제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이슈가 방송가를 휘감고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이번 2011 방통위 국감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과 국회의원들의 복안, 그리고 진행 배경을 소개하여 2012년을 향하는 방송정책발전에 힘을 보태려 한다.

<주파수 경매 논란>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사들의 가열 경쟁으로 인해 방통위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타당성 논란까지 일었던 이번 경매는, 향후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방송사-통신사 간의 논란으로 번지며 국감현장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돈 잔치로 기록된 '주파수 경매'는 어김없이 방통위 국감에도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통신비 인하 문제'였다.

22일 국감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93.6%가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통신 인하를 '검' 값 수준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통' 크게 내려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장 기본료 천 원 인하로 인해 통신사들은 연 1조5천억 원의 손해를 본다. 통신사들의 입장도 이해해줘야 한다."며 맞받아쳤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통신비보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시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동한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1조 원이 넘게 들어간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의원들은 "천문화적으로 치솟은 주파수 경매 금액은 당기 순이익, 최고경영자 연봉 등과 함께 고스란히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국감에 참석한 SKT의 이형희 전무는 "요금 적절성 여부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이내 필요 이상으로 과열양상을 보인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주파수 경매에 대한 논의가 끝나버렸다.

긍정적인 부분은?

통신사 결합상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현안에 주파수 경매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주파수 경매 가열 경쟁과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낸 것도 주요했다.



최시중 위원장

전혜숙 의원



진성호 의원

이용경 의원



김재윤 의원

무엇이 아쉬웠나?

주파수 경매에 대한 통신사들의 과열경쟁 자체를 방통위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으며, 향후 700MHz 주파수에 대한 방통위의 재할당 정책도 크게 변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재확인된 국감이었다.

특히 의원들이 통신사들의 철저한 이윤추구 마인드에서 탄생한 '무제한 데이터'가 결국 주파수 부족을 야기했으며 이에 부족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비 상승 위험을 감수한 '1조 원 주파수 과열 경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파수 부족 현상의 원인을 덮어둔 채 단기적인 통신비 인하만 주장한 것은 방통위의 잘못된 주파수 정책에 제동을 걸기에는 부족했다.

갑자기 나온 한 마디

"주파수 경매 도중 이석재 KT 회장에게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했느냐"(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 KT가 경매금액 1조 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경매 자체를 포기한 일을 캐물으며)

<미디어렐 법안, 도대체 누가 지연시키는 거야?>

3년째 표류하는 미디어렐 법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지금, 종편 개국 일시에 맞춰 국감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종편 개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로 떠오른 미디어렐 법안 관련 문제는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앞두고 시작부터 고성인 난무한 것도 모자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본 감사는 1시간이나 지나 시작될 정도였다.

이번 국감에서 미디어렐 법안 문제에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이었다.

시작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디어렐 법안에 대해 주무위원회인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방송광고시장은 이미 초토화되기 시작했다."며 "모든 것을 국회에 떠넘기면서 방통위는 나 몰라라 하는데 방통위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러 서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디어렐 법안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며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올해 말 개국하는 종편이 아무런 제지없이 직접 광고영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미디어렐 법안 의지가 빈약한 여당 의원들은 물론 방통위에도 비난의 수위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역으로 "지난 입법 논의 과정을 보면 야당측에서 법안이 상정돼도 기피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일방적 얘기만 주장해 왔다."고 맞받아쳐 미디어렐 법안 지연에 대한 책임을 야당측으로 돌렸다.

동시에 방통위가 뚜렷한 정부안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부안은 방통위 의결로 2009년 국회에 전달했다."며 "민영, 공영 각 방송사의 희망사항에 따라 민영을 하고 싶은 데는 민영을 하고 공영하고 싶으면 공영을 하는 것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하며 입법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섰다.

동시에 미디어렐 법안이 지연되지 않고 처리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이 대목에서 의원들과 방통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미디어렐 법안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리하자면,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렐에 반드시 종편을 포함시켜 미디어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디어렐 법안에 종편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현재 종편 관련 광고 영입이 자율로 보장돼 있어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여당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으며 홍성규 부위원장도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렐에 종편은 포함돼 있다."라며 "방송법에 종편은 자유영업으로 규정 있다."라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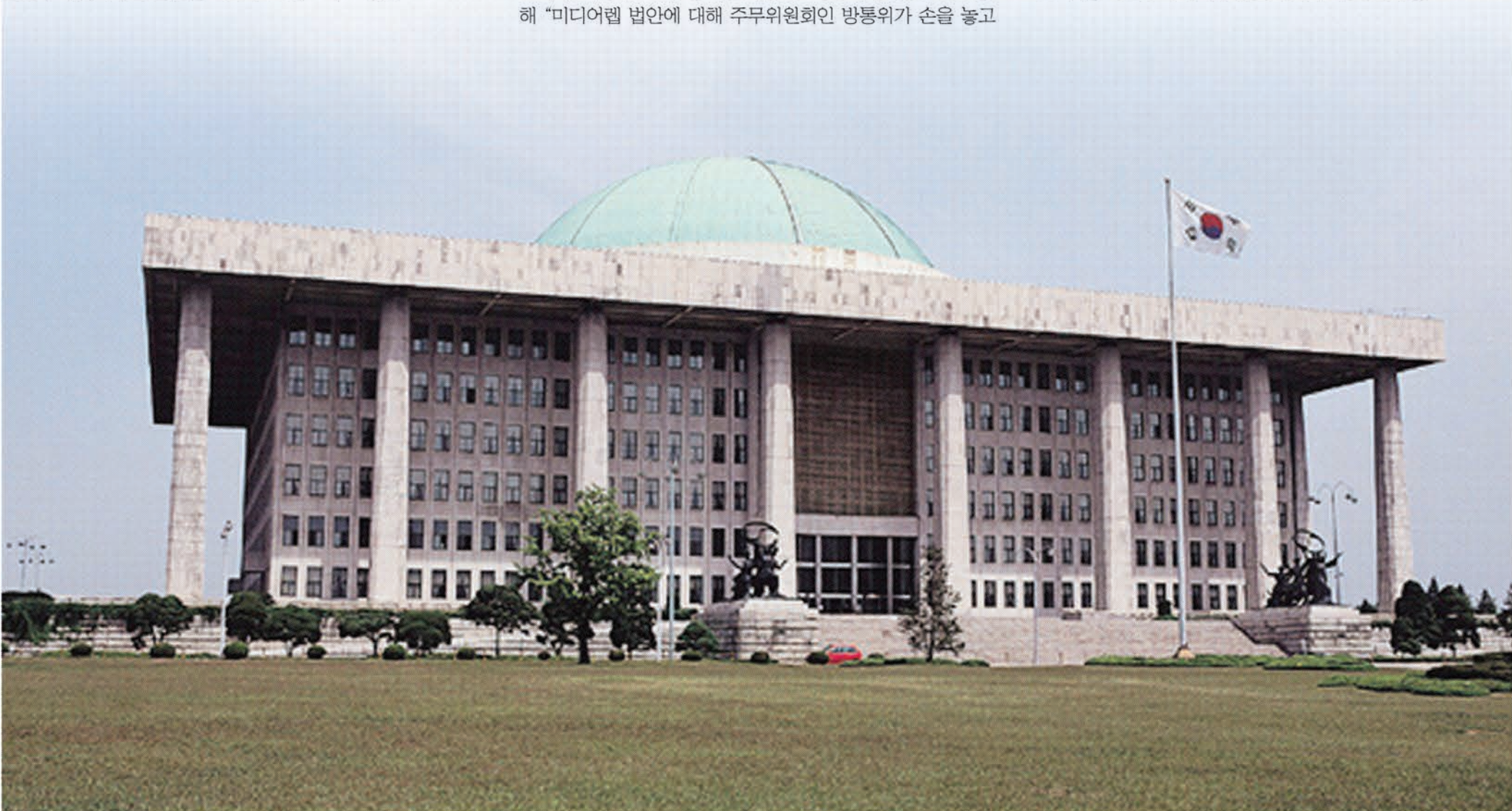
미디어렐 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는 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미디어렐 입법 지연을 둘러싸고 '남 탓'하는 것은 반대로 입법의지 자체는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방통위가 정부안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미디어렐 처리에 있어 방통위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방통위는 곳곳하게 "이미 안을 제출했고, 원안 그대로 간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아쉬웠나?

의원들이 서로 미디어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공방전을 펼친 점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견해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편의 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견해를 좁힐만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다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방통위가 종편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종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갑자기 나온 한 마디

"(종편의) 12월 개국에 맞추려면 개별 영입이 불가피하다. 일단 미디어렐 법안을 만들고 추후 종편을 포함시키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 미디어렐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 중)



국감을 진단하다

〈디지털 전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분노〉

2012년 전격적인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감장에서 관련된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2012년을 관통할 방송가의 최고 이슈는 단연 디지털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국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많이 이어졌는데, 최근 디지털 전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방통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도 쏟아졌다.

우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중소 기업에서 만든 보급형 디지털 TV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의 성능 좋은 디지털 TV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가 선정해 판매하는 보급형 디지털TV는 총 4종으로 20만원에서 86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이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에 비해 최대 60% 비싸고, 특히 보급형 디지털 TV로 선정된 대우디스플레이 제품은 더 나은 사양을 갖춘 LG전자 제품보다 10% 가까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보급형 디지털 TV는 3개월 간 총 23대 판매에 그쳤으며 방통위에서 1억5천만 원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엉터리라고 말하며 정부 지원 사업 이행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 디지털취약계층 168만 가구 가운데 정부로부터 컨버터 등을 지원 받은 가구 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1만2,970 가구에 그쳤고 방송사의 송신소 디지털 전환률도 40.7%에 불과해 예정대로 2012년 100%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HD 방송 신호를 SD로 번조해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료방송 가입자에게도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100억 원의 예산으로 방통위가 보급한 장애인 TV 수상기는 아날로그 방식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경우 장애인들은 '디지털 난민'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소하게 생각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내는 여기까지였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역 차별 지적을 발언하며 "방통위가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을 펴 지방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낀다."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작년, 올해 시범사업 한 것 모두 제주도 등 지방이다."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1년 앞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공과가 드러남으로서 향후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무엇이 아쉬웠나?

디지털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방통위의 로드맵 부재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된 보급형 디지털 TV 가격



문제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수'들에 대해 더 확실한 대책을 방통위가 마련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갑자기 나온 한 마디

"(디지털 전환 시) 컨버터만 배달하면 집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느냐. 방통위는 홍보만 신경쓰지 말고 2013년 1월 1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허원재 한나라당 의원 /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병헌 의원



안형환 의원



김창수 의원

〈황금채널은 없다? 종편특혜 논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방통위의 종편특혜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최근 <본지 128호 1면 하단기사 '종편 4사, 채널협상 집단압력'>에서 소개하기도 했지만 종편 사업자들이 만든 협의회가 SO들에게 황금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건을 둘러싸고 국감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종편특혜에 대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편협의회가 SO에 공문을 보내 채널배정을 요구한 사태에 대해 "8월부터 종편이 협의회를 결성해 개별적으로 SO들을 불러내는 것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12월 개국을 준비 중인 종편과 방통위를 겨냥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특혜를 준 것 없다."며 "종편이 SO에 부당한 압력을 가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종편특혜에 대한 의혹은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미디어법 법안 문제와 맞물려 질의가 이어졌으며 종국에는 종편이 황금채널을 배정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주장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황금채널이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못된다."고 해명했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은 의무재송신을 해야 할 권리가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SO들과 채널 문제에 대해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종편그룹과 SO 그룹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채널을 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종편특혜 논란에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꾸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종편 사업자들이 협의회를 통해 SO들에게 개별 공문을 발송, 낮은 번호 채널을 요구한 사태를 의원들을 통해 재확인했으며 결말이 어떻게 되든,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이 아쉬웠나?

종편특혜는 비단 SO의 낮은 번호 채널 배정만 있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미디어법 법안과 함께 강도 높은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한선교 의원

갑자기 나온 한 마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담압력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김부겸 의원이 종편 채널협상에 대해 방통위의 공식 의견을 묻자)



최시중 위원장



김부겸 의원

우여곡절도 많고 논란거리도 많았던 2011 방통위 국정감사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이슈 외에도 '스마트폰 관련 현안' '개인정보 유출문제' '통신사 합인' 등과 함께 난데없이 최시중 위원장의 위증문제가 겹쳐 이번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 논란의 형국에서도 결국 올바른 방송기술정책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방송기술인'의 몫이며, 합당한 정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것도 스스로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가니’ 열풍... 그리고 불편한 진실

믿을 수 없지만,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부터 5년간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나라당은 부라부라 ‘도가니법’ 제정을 입법예고하며 동시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에 들어갔다. 이례적으로 홍준표 당 대표까지 나서 직접 당의 입법예고를 내비치기도 했다. 동시에 해당 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짐했고 경찰도 수사팀을 급파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영화를 보며 인면수심의 가해교사와 교장, 지역 침묵의 카르텔에게 분노하기 보다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접근해서 보자. 이번 ‘도가니’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곳은 광주 인화학교, 즉 사회복지법인이다. 그리고 이곳은 철저하게 친족벌 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 예전부터 그랬다.

그런 이유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폐쇄적으로 돌아가는 사학에 사회복지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익이사직 형태로 두어 외부견제의 여지를 남겨놓아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시 거대 정당의 반대와 사회복지법인을 소유한 특정 종교의 로비, 여기에 유력 정치인의 대단한 촛불시위 등의 정치논리로 좌초되었다. 불편한 진실이다.

도가니 영화가 흥행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유력 정치인들은 SNS등을 통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2007년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그저 대세에 물타기하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들이 해야 할 말은 ‘안타깝다’ ‘눈물이 난다’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폐쇄적이고 족벌형태로 파행 운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감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리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아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을 위해서라도 자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이번 사태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견제가 필수적이다.

다소 비장해보이기까지 한 이 글은 현재 대한민국을 분노의 감정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있는 영화 ‘도가니’의 소개글이다.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실제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 장애아를 상대로 가해졌던 끔찍한 성폭력을 담았으며, 영화는 담담하게 피해 아동과 진실을 밝혀내려는 교사와 인권센터 직원, 그리고 권력을 등에 업은 ‘침묵의 카르텔’을 묘사해냈다.

하지만 이 단 한편의 영화가 놀라게도 2005년 처음 사건이 발생한 직후 영원히 잊혀질 줄 알았던 진실의 순간을 일깨워냈다. 그리고 영화 ‘도가니’를 통해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관객은 분노했으며 동시에 인면수심의 가해교사와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했던 사회 기득권을 향해 성역없는 책임을 물어가게 된 것이다. 물론 기득권이 어떻게든 다시 묻어버리려 하겠지만 말이다. 결국 정치권도 비뚤졌다.



안철수 신드롬을 다시 생각하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흔히 <그레섬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 말은 한 사회에서 나쁜 통화와 좋은 통화가 동시에 유통될 경우 나쁜 통화가 좋은 통화를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두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안철수 씨를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맹목적인 안철수 지지만 있을 뿐 이 현상이 불러올지 모를 오류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들쭉이고 있는 ‘안철수 신드롬’에는 정치인 안철수가 없다. 의사출신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IT연구소 최고 경영자였으며, 지금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라는 사회적 배경만 있을 뿐이다. 그에겐 국가 행정 집행과 같은 공직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은 그의 사회적 배경만을 보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마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듯 안철수 개인에게 열광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엔 정당정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란 특정후보의 개인적 매력이나 그가 내세우는 정책, 정책의 실현 가능성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 정당 즉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의 근간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정당정치에서 나왔다. 최근의 현상이 기존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정치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안철수 신드롬’은 대한민국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상이다.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선 안철수 원장 뿐만 아니라 조국 교수와 같은 제3의 인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가 뜨겁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소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출간하거나 문화콘서트 형식을 빌려 대중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진다.

흔히 신드롬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어두운 미래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해결 방법이 없는 청년 실업,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 소통할 수 없는 정치 리더십 등이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게 만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안철수 신드롬’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소통해 실천해야 한다.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국민들은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듯 기존 정당정치의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club.kobeta.com
- 방송과기술 magazine.kobeta.com
- 방송기술저널 journal.kobeta.com
- 모바일 방송기술저널 m.kobeta.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 연 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재철 사장의 꿈수와 뒤통수치기

총파업 직전에 MBC 노사의 단체협약이 타결되었다. 나름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기는 하다. 인인권 침해라며 회사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던 중간 평가제를 얻어냈다. 본부장에게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조합원들 3분의 2이상이 공정방송 실현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를 사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부 구성원들을 통해서 본부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공정방송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정방송침해자를 문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제작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내 분위기를 쇠신하는 조치를 하고 상향식 평가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사에 대한 일방적 광역화를 지양하기로 하고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잘만 운영된다면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노조가 내건 파업의 '공식' 명분은 "임금단체협약 쟁취와 MBC 정상화"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연초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단체협약은 쟁취해냈다. 그러나 'MBC 정상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단협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단협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작 자율성의 상징이었던 '국장책임제'는 새 단협에선 사라지고 본부장책임제로 대체됐다. 본부장 책임제는 경영진의 직접 통제 가능성을 높였다. 경영진을 통한 권력이나

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

특히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 문제를 쏙 빼뜨리고 합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PD수첩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을 해온 MBC의 대표적 공영프로그램이다. 대법원의 판결취지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언론의 본질적 기능임을 분명히 하였는데도 회사는 사소한 꼬투리를 빌미삼아 제작진을 중징계했다. 회사는 언론의 비판정신을 탄압하려는 검찰에 단호히 맞서고 이들로 부터 비판적 언론인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야 했음은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비판과 감시라는 저널리즘 기능이 사라진 방송에서 공정성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공정방송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단협을 쟁취하는 것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작진 징계건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면 최소한 조합이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합이 비판적 저널리즘 정신을 조직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권력과 내통한 경영진의 탄압에 누구나 주눅이 들 수 있다. 정 권으로부터 받은 고초로도 모자라 내부에서도 중징계를 하는 마당에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감히 권력에 대한 비판의 날을 들이대기 어렵다. 자기 검열을 통하여 비판적 아

이템을 아예 기획하지도 않고 다루더라도 핵심은 피한 채 비판하는 흥내만 내게 만들 수도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신뢰다. 이들은 임시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치고빠지기의 명수이다. 제도적 장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한 쪽이 온갖 핑계와 빌미를 들이대며 지키지 않을 때에는 별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 사내 분위기 쇠신을 위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못박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립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동안 김 사장이 자신의 말을 어떤 식으로 뒤집었는지 노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김우룡 전 방민진 이사장의 이른바 '췌인트' 발언 직후 'MBC 사장과 구성원들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고소하겠다고 펄펄 뛰더니 조금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회화했다. 지난 8월에는 사표를 냈다가 며칠만에 다시 거두어 들이는 열거적 코미디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다. 꿈수의 알맹이는 지난해 황희만 부사장 임명이었다. 노조와 교체를 약속했던 황희만 본부장을 특임이사로 임명했다가 한달 만에 더 높은 직책인 보도·제작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낸 것이다. 그가 보도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합의의 취지를 뒤집는 것이었다. 해명도 구차하고 뻔뻔했다. 노조와의 합의는 그를 보도본부장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지 부사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 강변했다. 결국 MBC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으나 부사장 임명을 철회시키지 못한 채 파업을 접어야 했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제 합의는 타결되었다. 공정방송으로서 MBC를 정상화하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정신이다. 방송을 통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아무래도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신뢰하기는 어렵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담아서 이들이 합의정신을 제대로 해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하고 있다가는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 더 필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집행부의 노력이다. 조합원들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지만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지도력이다. 내부 구성원들이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공정방송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공정방송조항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현장에서 PD와 기자들이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에서 공정성을 높이려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치열한 참언론인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사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민주적인 시민들과 연대와 소통은 가장 튼튼한 힘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힘은 바로 시청자와 민주적 시민에게서 나온다.

안 종 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사)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공동대표

국민을 위한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 필요

2011년 6월 29일 오후2시 제주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을 개시하였고 당일 이를 축하하는 KBS 열린음악회가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현지 생방송되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민의 6,000가구 이상이 TV가 나오지 않아 이 축하공연 방송을 볼 수 없었다. 이들의 대부분이 독고노인과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었다. 이들은 제주도민을 위해 시범 실시한 디지털 전환 사업의 수혜 대상자였으나 결과는 방송의 소외자가 되어 버렸다.

전국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새벽4시 아날로그TV/방송이 종료되고 이후 디지털지상파방송만이 서비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한 파급효과중 시청자 관점에서 전 국민이 양질의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향유케 하는 시청자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실시된 충북 단양, 경북 울진, 전남 강진 그리고 제주도의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결과는 이러한 정책 과업을 구현하기 위해 향후 1년밖에 남지 않은 전국적인 디지털 방송전환 과정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방송제작에서부터 시청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디지털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이 구현될 때 성공할 수 있는 전국민 이주 사업이다

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전환은 시청자 주권, 시청자 참여,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 구현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때 1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디지털 방송 전환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가전 및 수신기 업체, 학계, 시청자 대표, 소비자 민간단체를 망라한 범국가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협력기구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도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가 함께 디지털 방송 전환을 국가적인 중대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업체와 학계 그리고 시청자 대표와 소비자 민간단체들도 함께 디지털 방송 전환의 추진에 참여하여 중대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이슈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고화질과 함께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 등 디지털 방송 전환에 의한 시청자 관점의 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디지털 방송전환의 서비스에는 고화질과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고화질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청자들은 전혀 실감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디지털 전환을

해야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야 하는 경우는 이로 인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고도화된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지상파 방송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바 정책 당국은 하루속히 디지털 전환에 의한 시청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와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시청자의 불만을 없애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기본으로 하여 수신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디지털 격차의 심화가 우려되는 디지털 방송시대의 시청자 복지의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무료 수신환경이 제공된 환경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만을 수신하든지, 케이블이나 위성 또는 IPTV 등 유료방송을 가입하여 이용하든지의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전 국민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경제적인 관점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 즉 장애인, 독고 노인, 농어촌 외곽 홀로 주택 거주자, 다문화 이민자 가장 세대 등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설치 등도 지원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국민 디지털 전환 홍보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거국적인 대 이주정책이란 인식을 가지고 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전략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보완을 통한 디지털 방송전환 추진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상의 정책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2008년 제정되어 디지털방송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고, 2012년 12월31일 디지털 방송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디지털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관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을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전환에 동참하고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되며, 고도화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격차가 해소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 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A(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3219-5635 팩스 : 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KOBA 2012 제22회 국제방송 음향·조명기기전

22nd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5.29~6.1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예정)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kobashow.com

